

정책브리핑

해수부, 2018 세계 해사의 날 행사 참석

김영춘 장관, 16일까지 유럽 방문

해양수산부는 김영춘 장관(사진)은 '2018 세계해사의 날' 각료급 회의 참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및 유럽 해운업 단체 면담 등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영국, 폴란드 등 유럽지역을 방문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14일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채택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폴란드와 IMO가 공동 개최하는 2018 세계 해사의 날 행사에 15일까지 참석한다. 김 장관은 50여 개국의 해운·해사 관련 부처 장·차관들과 각료급 회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자율운항선박, 사이버 보안 등 친환경·스마트 해운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하여 논의한



다. 또한 회원국들 간의 기술협력 강화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기념행사 이후에는 카우 분 완(Khaw Boon Wan) 싱가포르 교통부 및 사회간접자본부장관과 클레오파트라 돔비아-헨리(Cleopatra Doumbia-Henry) 세계해사대학 총장 등 주요 인사들과의 양자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중국 등 주요국의 장·차관급 인사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해운·해사분야 상호 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세종=최신동 기자



손 높이 든 이재명-추미애-임병택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가 10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롯데마트 시흥배곧점 앞 사거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임병택 시흥시장 후보 지원원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왼쪽), 임병택 시흥시장 후보(오른쪽)와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점심시간 식당 이동중 다쳐도 '업무상 재해'

근로복지공단, 오늘부터 지침 시행

점심시간에 노동자가 구내식당이 아닌 회사 근처 식당을 오가는 중에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지침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노동자의 식사와 관련한 사고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오갈 때 발생한 사고에 한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왔다.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기준으로 산재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결과다. 그러나 이는 구내식당 유무를 포함해 개별 사업장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부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기로 한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좁은 해석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취 사회 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세종=최신동 기자

해외 기술규제 극복 학술경진 열린다

8월 24일까지 TBT논문대회 접수 오는 11월 2일 본선 발표대회 개최

최근 세계적으로 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기술규제의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 경진대회가 열린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연구자료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2018년 무역기술장벽(TBT) 논문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BT)이란 국가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인증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말한다.

논문대회 참가신청 접수는 8월 24일까지며 원고제출은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서류심사 및 11월 2일 열리는 본선 발표대회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게 된다.

특히, 학생부 대상 수상팀에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참가 기회를 부여해 실제 통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술규제 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최신동 기자

에너지·헬스 등 지역 클러스터 외투기업 준해 인허가기간 단축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부, 균특법 시행령 입법예고 혁신도시 프로젝트 지원 등 준비

지역 혁신성장거점으로서의 '국가혁신클러스터'의 구체적인 모습이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20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이달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40일간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도별 혁신성장거점인 국가혁신클러스터는 대표산업과 면적·환경,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외국인투자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을 연계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인·허가 기간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인·허가 기간에 준해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하반기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에 앞두고 혁신도시 등

을 중심으로 면적 15㎢ 내에서 지구계획과 대표산업에 대한 혁신프로젝트 지원 및 앵커기업 유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지역혁신체계의 경우 지방정부 주도로 창의적인 혁신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지출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고, 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시·도에는 지역혁신지원단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는 지역혁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 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업무의 지원 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또는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형발전지원부처협의체를 운영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도록 했다.

한편,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방정부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지역 현안사업을 다년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예산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산업부 중심으로 규정돼 있던 운영방식을 국가균형발

전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해 여러 부처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대상사업 선정기준도 국가균형발전계획과의 관계, 지역 현안과의 밀접성, 관계부처 범위, 지역주민의 체감도 등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지역경제총괄과)에게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국민은 누구나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운영의 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발전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개정안인 만큼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동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휘발유 값 7주연속 상승

국내 휘발유 가격이 7주째 상승곡선을 그리며 평균 1610원에 육박했다. 사진은 10일 한가한 분위기를 보이는 서울의 한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

'고용위기 지역' 생계비 지원 2배 확대

근로복지공, 1천만원→2천만원으로 울산시 동구·군산시 지역 등 대상

근로복지공단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실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인다고 10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은 울산시 동구, 군산시,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전남 목포시, 영암군 등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분은 취약계층이 생계비 부담 없이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대부 한도를 높인 것은 지난달 21일 추경경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대부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대상자는 3주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고용위기지역내 주소를 두고 있

는 전직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다.

또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이전 1년에 해당하는 날 이후 이직해 실업상태인 사람이어야 한다. 대부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나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실직 노동자들이 생계비 부담없이 직업훈련을 받고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동 기자

농식품부,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근거 마련

'은퇴 조합원 혜택' 정관례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 농축협 조합원이 은퇴 후 조합원 지위를 잃더라도 조합의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예 조합원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오는 11일자로 명예 조합원에 대해 교육지원사업, 배당청구권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장관 고시인 농축협 조합 정관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정관례는 70세 이상, 조합 가입 20년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은퇴 농업인이면 준(準)조합원으로서 소정의 가입금과 경비 등을 납입하고 조합 사업의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고령 은퇴 농업인의 기여를 인정해 조합 사업을 계속 이용하고 지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제도가 조합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실제 도입 여부는 조합이 정관 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명예 조합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조합은 개정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세부 내용을 조합 정관에 반영하면 된다"며 "이번 제도가 고령 은퇴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농촌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신동 기자